

여야, 첫 영수회담 앞두고 기사움 ‘팽팽’

민주 “채상병 특검”에 답해야
“야권 요구 실질적으로 관철을”
국힘 “민생지원금 의제 안돼”
안철수 “국민 눈높이 소통 필요”

이번 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여야의 기사움이 치열하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민주당 실무진은 22일 영수회담 시기와 의제, 참석자 등을 두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어떤 의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눌지 관심이 쏠린다.

국무총리 인준부터 민생 지원금, 의대 증원 문제, 양곡관리법, 간호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 쟁점 법안들까지 여러 현안이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과 3대 개혁(교육·노동·연금)에 대해서도 야당의 협조를 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야권에선 이재명 대표에게 강경하게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여주기식’ 회담에 그칠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아 4월학생혁명기념탑에서 분향하고 있다. **뉴스**



야권의 요구를 실질적으로 관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인주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경제, 민생, 외교 등 실질적인 정책 여젠다에 관해선 국정을 견제하며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문 의원도 “경제 물가 외교와 같은 민생 현안은 물론 채 상병 특검, 이태원참

사 특별법 등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한 논의 의도 가감 없이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사진을 찍기 위한 형식적 만남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적 요구에 성실하게 답하시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영수회담에서 언급할 핵심 의제는 민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기간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민생회복지원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민주당은 13조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 등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정부와 여당에 요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당원과의 만남에서도 “전국민재난지원금은 이번에 만나면 얘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에서 정부가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의제로 수용해선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이 나왔다.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총선에서 대승한 야당의 25만원 전 국민 지급과 같은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 공약은 맥없이 뒤따라가는 것도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일”이라며 야당의 의제 설정에 제동을 걸었다.

안 의원은 “야당의 1차 대화 상대는 여당이고 정부이지만, 여당의 1차 대화 상대는 국민이어야 한다”며 “재정을 쓰더라도 물가 안정의 단기 정책 목표를 해치지 않는 한에서 부유층에게까지 같은 액수를 나눠주기보다 어려운 계층을 집중적으로 도와드려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야당과의 소통은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정부가 총선 참패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국정 운영의 변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선 최우선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대통령실 ‘인적쇄신’ 영수회담 이후 전망

기존 참모들 회담 준비에 총력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급 참모진 인선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 안팎에선 내주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 이후 새로운 참모진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건에 불과하나, 윤 대통령이 다음주 이 대표와의 회동을 약속한 만큼 새로운 인사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과) 날짜, 의제, 형식 등을 조율해야 하나 새로운 참모들이 오면 업무에 적응하기도 전에 야당과 만나는 셈이라 사실상 쉽지 않다”며 “일단 인사보다는 이 대표와의 회동이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취임 후 첫 야당 대표와의 회동인 만큼

윤 대통령과 그동안 합을 맞춘 기존 참모들이 준비에 총력을 다한다는 뜻이다.

실제 대통령실과 여권 등에 따르면 한오섭 정무수석비서관은 22일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과 만나 영수회담 시기와 의제, 참석자 등을 두고 협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만나 대통령실 인선을 논의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그동안 비서실장으로 거론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정진석 의원 등을 놓고 “국정 쇄신의 의지를 찾을 수 없다”며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민주당 측의 입장을 경청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선욱 기자

국힘 내부 ‘윤석열 배신론’ 놓고 공방전

한동훈 “배신 아닌 용기” 반박 홍준표 “당에 얼씬거리면 안돼”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윤석열 배신론’을 놓고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지난 20일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꺼내든 ‘윤석열 배신론’에 대해, “배신이 아닌 용기”라며 반박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 뿐”이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이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 뿐’,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 등 표현은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당 일각에서 나온 ‘윤석열 배신론’을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정교하고 박력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정교해 지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비윤계로 꼽히는 김영우 전 의원 등도 한 위원장을 겨냥한 배신론에 대해 ‘비열한 흐름’이라며 비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전북 출신’ 김윤덕 사무총장·진성준 정책위의장

전략기획위원장 민형배 법률위원장 박군택 선임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신임 사무총장에 3선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갑)을, 정책위의장에는 전북 전주 출신인 김성준 의원을 임명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당직 개편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친명(친이재명)계로, 최근까지 당 조직사무부총장을 맡았다. 4·10 총선에선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사무총장은 당내 인사, 조직 등 살림살이 전반을 맡는 자리다.

수석사무부총장은 3선의 강득구 의원, 조직사무부총장은 황명선 당선인이 선임됐다.

정책위의장은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을)이 임명됐다.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 민병덕 의원, 전략기획위원장에 민형배 의원이 낙점됐다.

당 대표 비서실장은 천준호 의원이 유임됐으며, 당 대표 정부조정실장에는 김우영 당선인이 지명됐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전반을 대응하는 법률위원장은 이 대표의 법률특보이자 대장동 재판에서 이 대표 변호를 맡았던 박군택 당선인과 인권 변호사 출신의 이용우 당선인이 공동으로 선임됐다.

앞서 6선인 조정식 사무총장과 3선인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등 민주당 정부직 당직자들은 총선 이후 당의 재정비를 위해 일괄 사임했다.

한 대변인은 “4·10 총선 민심을 반영한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동력을 형성하고 신선 인사들에 기회를 부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조정식·박찬대, 국회의장·원내대표 출사표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의 대표주자격인 조정식 사무총장과 박찬대 최고위원이 21일 각각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과 원내대표선거 출사표를 던졌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총선 민의를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 당이 국회 운영에서 주도권을 갖고 임하고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앞장서서 역할을 하겠다”며 전반기 국회의장 도전 의사를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6월부터 22대 국회가 시작된다.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첫째는 정권 심판이고 둘째는 민생회복”이라며 “22대 국회는 이 두 가지로 표출된

민심과 민의를 제대로 구현하고 실천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9일 사무총장직을 사임했다.

당내 국회의장 후보군으로는 6선 추미애 당선인과 5선 조정식·안구백·김태년·윤호중·우원식 의원, 박지원·정동영 당선인 등이 거론된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천하는 개혁국회, 행동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강력한 투쟁체제로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는 개혁국회, 민생국회를 만



조정식 박찬대

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22대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선 “압도적 과반의석을 만들어주시민 국민의 뜻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책임을 다 하라는 것이다.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이 맡아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5월3일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 선출한다. **서울=김선욱 기자**

여야 4당 의원 11명, 간호법 재발의

여야 4당 의원 11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을 재발의해 제정 여부가 주목된다.

21일 여야에 따르면 간호법은 지난 19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하

고, 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자유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로 이름을 올렸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해 간호사 등의 면허 및 자격, 업무 범위, 양성 및 수급, 장기근속 등을 위한 간호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 한다”고 법안 재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김선욱 기자**